

#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하락 배경과 향후 전망

작성자 : 전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 2012년 11월 2일

## ■ 최근 들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S&P가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함.

- 지난 9월 27일 무디스가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로 강등시킨데 이어 10월 12일 S&P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sup>1)</sup>
  -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강등 조치임.
- 남아공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된 만큼 추가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1.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평가 현황

신용평가회사		신용 등급		전망
		변경 전	변경 후	
S&P	외화표시 장기채권신용	BBB+	BBB	부정적
	자국통화표시 장기채권신용	A	A-	
무디스		A3	Baa1	부정적
피치		BBB+	-	부정적

자료: Bloomberg; 노무라자산운용사.

## ■ 무디스와 S&P는 광산파업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정치·사회적 불안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

- 지난 8월 16일 발생한 '마리카나 참사'<sup>2)</sup> 이후 광업부문의 파업이 남아공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전체 광업노동자의 16%인 약 8만 명이 파업에 참가 중임.<sup>3)</sup>
- 두 기관은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주마 정부의 미흡한 갈등 중재·해결 능력이 정치적 불안은 지속·심화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와 정부에 대한

1) S&P는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AAA에서 최하 D, 무디스는 최고 Aaa에서 최하 C로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BBB-와 Baa3까지를 투자적격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총 21단계 가운데 상위 10단계에 해당함).

2) 남아공 경찰이 영국계 광업기업 Lonmin(세계 3위 백금생산업체) 소유의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발생한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업광부를 향해 발포하여 총 34명이 즉사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가리킴.

3) 남아공 GDP에서 광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파업 자체가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남아공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

- 아울러 이러한 정치·사회적 긴장이 재정지출 수요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건전성(fiscal flexibility)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무디스의 경우 이번 강등 결정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거시 경제 상황도 반영함.
-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2.6%)와 경상수지적자 확대(GDP대비 5.5%)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표 2. 남아공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경제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질 GDP 성장률	5.5	3.6	-1.5	2.9	3.1	2.6
재정수지(GDP 대비)	1.5	-0.5	-5.3	-4.8	-4.6	-5.0
경상수지(GDP 대비)	-7.0	-7.2	-4.0	-2.8	-3.3	-5.5
국가채무(GDP대비)	28.3	27.4	31.5	35.3	38.8	41.2
- 대외채무(GDP대비)	1.8	1.9	1.8	2.0	2.0	2.1

자료: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IMF, 2012)

■ 이번 남아공 신용등급 하락의 촉발요인인 광산파업 사태는 남아공 사회 기저에 깔린 불만과 불안이 상대적 박탈감<sup>4)</sup>에 기인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주마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부와 소득의 분배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음.

- 남아공의 지니계수는 1993년 0.59에서 2009년 0.63으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흑백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흑-흑 간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음.
- 상위 10%는 갈수록 부유해지는 반면 하위 50%는 하루 2달러로 생계를 유지함.
- 남아공은 BEE(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광업현장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부와 소득의 분배·재분배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 제도의 구속력·집행력의 문제이자 정부와 고용주의 이행의지에 달린 문제임.
- 광산파업 사태의 해결과 광업부문 개혁 여부는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임계점에 달한 남아공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

〈자료: Economist, The Guardians, Financial Times, 노무라자산운용사, HSBC 투신운용사 등〉

4) 광산파업의 확산·장기화 배경에는 광업기업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고용·환경·주거 등에 대한 법적·정책적 규제조항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광부들이 인식의 작용한 것으로 보임.